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교육, 복지, 고용 분야의 정책 및 법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복지·고용 법제상의 각종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기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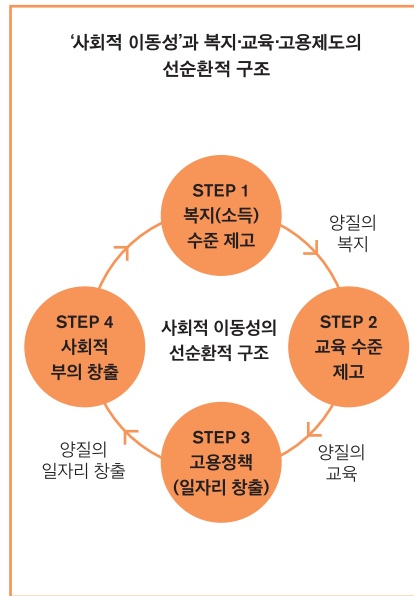
최근 들어서 각 국가별로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 수준이 자녀 세대에게로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격차 사회, 계급 사회로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현상(격차),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 예를 들어 세대 또는 계층 간 갈등, 사회통합 약화, 빈곤 및 건강 불평등의 세습, 경제성장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술혁명시대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손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 hyun@klri.re.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 사회투자 패러다임, 지속가능 발전과 같은 아젠다로 적극적 사회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배경에는 사회적·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이동성' 또는 사회 이동, 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이란 세대 내, 세대 간에 있어 사회 지위 또는 계층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은 생애에 걸쳐 개인의 소득과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은 부모와 자식, 손자 세대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 지위 또는 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의 감소 또는 약화가 사회통합 및 성장 저하, 중산층 붕괴,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 수준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2017. 12. 20.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발표, 2019. 2. 19.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복지,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적극적 사회 정책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 지출 중심의 정책 추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 복지, 고용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에 있다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지출과 입법적 조치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이동성’은 전통적으로 부모 교육 및 소득, 직업이 자녀 세대에게로 대물림이전 되는 문제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교육·고용·복지 제도가 상호 연계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실제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의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 복지, 고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복지·고용 법제상의 각종 제도들이 연계,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도 기반을 마련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 한 분야의 어떠한 정책 수단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이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도입·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는 교육, 고용, 복지 법제 분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이들 분야의 정책 및 법제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범위는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교육, 복지, 고용 정책 및 법제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교육, 고용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어야만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어,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복지, 고용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교육, 복지, 고용 분야의 정책 및 법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복지·고용 법제상의 각종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기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현대적 의미,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 및 법제 분석 기준과 원칙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현행 교육, 복지, 고용법제들이 법제 및 정책 변화 요인, 사회 환경 변화 요인에 맞추어 어떤 입법적 흐름 및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사회적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교육·복지·고용법제의 방향과 분야별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복지, 고용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정책 및 법제 상호간의 융합적 효과를 발휘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기여하고자 한다.